

데스크칼럼

박정렬

사회부 부국장 대우



대한민국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파면, 대통령선거를 통한 새정부 출범, 관세협상, 한미·한일·한중 연쇄 정상회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응한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지난해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국가 지원 사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행정통합’ 이슈가 제기된 이후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더해지면서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때보다 크고 강한 파도가 돼 시·도민에게 밀려오고 있다.

행정통합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합의 맞으며 시작됐다. 김 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을 밝히자, 강 시장이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3일 후인 지난 2일 양 시·도 지사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를 마친 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

‘변방 아닌 중심’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자

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속도를 냈고, 양 시·도는 5일 추진기획단 구성과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과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제시했다.

시·도 간 협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일에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광주·전남 국회의원, 시·도 지사가 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열어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파격적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 행정통합 성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양 시·도의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며 이번주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속도전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의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축’ 체제로의 변화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정책적 선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등 생존을 위한 변화에 내몰렸다. 각각 인구 140만명과 180만명 수준의 광역지자체로는 경쟁력에서 밀릴뿐만 아니라 서남권이라는 지리적 제한도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 반전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선택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합쳐질 경우 곧바로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 150조원의 대형 지자체로 재탄생하게 된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적으로 광주·전남

이 분리되지 40년만에 다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RE100 국가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등의 전남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전동지’할 변화를 예상했다.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키우면서 이번 행정통합이라는 더 큰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 보다는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과정 속에서 밝은 청사진만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분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곳도 존재할 것이다. 이 같은 모든 것을 제시한 후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후해야 제대로 된 통합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속도만 내는 것이 아닌 준비된 정책과 정돈된 절차를 보여주는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 정부 주도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새 길을 스스로 열어나가야 한다.

변화의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이뤄 대해로 나아가 듯, 광주·전남의 변화도 시·도민의 작은 목소리가 하나하나 반영돼 큰 함성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변방이 아닌 역사의 중심에 서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기대한다.

사설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역대최대’ 비결은

‘메이드인 전남’ 농수산 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수출액이 7억9375만달러로 집계됐다. 달러당 1450원의 환율을 적용할 경우 1조 1509억3750만원의 실적을 거둔 것이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한 수치고, 전국 평균 증가율(6.5%)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여기에는 김과 쌀, 과자류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확대되고, 일본·미국·중국 등 기존 주력 시장과 함께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김 수출액은 3억9577만달러로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49.9%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한 수치다. 쌀은 5781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62.7%, 과자류는 105.0% 늘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일본 1억9527만달러, 미국 1억5483만달러, 중국 1억2538만달러 순이었다. 중국 수출액중 김 비중은 37.0%, 수출액은 4683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64.8% 증가했다. 또 태국 수출도 전년도보다 36.4%증가하는 등 신흥시장인 동남아에서도 성과가 뚜렷히 나타났다.

사실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020년 4억6200만달러에서 2021년 5억6000만달러로 증가했던 수출은 2022년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5억6000만달러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 다시 6억3200만달러, 2024년 7억8000만달러, 지난해에는 12월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7억9375만 달러로 전년치 수출실적을 넘어섰다.

이처럼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전남도의 공이 크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고 시장개척 수출상담회, 해외 마케팅 지원 등 현지 유통망 확대와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펼친 것이다.

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에니메이션 ‘케이팝 대몬 헌터스’를 비롯한 한류확산과 K-푸드 열풍도 여기에 한 몫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세계인을 사로잡는 농수산물식품의 수출확대에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광주 전주기 창업지원체제 구축 효과 기대

광주시가 스타트업의 탄생부터 성장, 그리고 제품 양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창업지원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분촌산단 내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와 광주역 창업밸리 내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가 각각 2월과 3월 준공기로 한 것이다. 이들 시설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7월께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빛고을창업스테이션)와 하나로 연결되는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삼각벨트를 통해 예비창업부터 기술 실증, 시제품 제작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창업 지원 체계를 완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스테이지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거점 인큐베이터로, 기술창업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초기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예비·초기 창업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대·중견기업 협업 모델 개발, 해외 진출 등을 해 왔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31개 전문 지원기관도 입주해 한층 탄탄한 창업 생태계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는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80개 입주공간을 갖춘 이곳은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창업기업과 마스터기업 간 매칭·협업과제 추진 등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는 기술 고도화(Tech-Up)와 실증의 거점으로 창업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시장 진출 전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기술 실증과 투자 유치, 기업 간 협업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성장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들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장 진출 이전 단계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창업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인 만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기반시설 구축이 실제 성과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창업 성공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고

박민국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장



겨울이 왔다고 느껴질 만큼 바람이 차갑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청년이 처한 현실은 더 춥게 느껴진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청년들에게 가혹한 기사를 쏟아내기 바쁘다. 특히 고령층의 취업률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며 ‘부모 세대는 계속 일하는데 청년은 놀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기사도 있다. 1986~1995년에 태어난 30대들은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이다. 일자리 시장에서 부모와 자라다툼을 하는 세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모든 30대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사업으로 발생한 통계상 왜곡도 있지만, 아직 부모에게 의지해 살고 있다는 30대가 늘어났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을 하지 않을까?

청년이 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자리 개수만 놓고 보면 많다. 하지만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혹은 일할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는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같은 곳만 원하는 것 아니냐’, ‘일자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정년을 보장하고 성과와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터로 대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만 해도 공무원은 인기가 없는 직업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공무원보다는 급여 수준이 높고 대

일하고 싶은 청년

우도 좋았기에 공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선망의 직업이 된 것은 IMF를 겪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부도와 파산으로 실적이 발생할 때 공무원만이 청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당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왜 중소기업은 기피 하나고 문기 전에 중소기업이 안정성과 보상, 성장 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산업구조 사회구조의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년이 일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보상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액은 올랐다. 하지만 소득액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는 더 높게 올랐다. 쉬었음 청년 중 절반 이상은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인데 이들이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로 ‘급여와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다. 소득이 인상된 것에 비해 물가는 훨씬 올랐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면서 식비와 교통비 등의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사회생활을 위한 경조사 등을 행기다 보면 남은 돈은 미래를 준비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런데 독립에 꼭 필요한 주택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을 때 5.8년이 걸린다는 2021년의 조사 결과(광주 기준)를 보면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독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기에 30대는 아직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투자 성공담에서 큰 상실감이 드는 것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정보 비대칭과 자산형성을 할 수 없는 환경 탓에 부의 흐름을 놓쳐 발생한 격차를 조화하는 ‘배려거지’라는 말이 탄생했고 이솝우화 ‘개미와 베짚이’를 비꼬아 개미는 과로사 하고 베짚이는 물려받은 자산과 놀며 노래했던 읍원이 대박 나서 더 잘 먹고 잘살게 됐다는 만화가 나오기도 했다.

개미처럼 일하고 베짚이처럼 놀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던 30대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 이유는 불안정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최근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공감하는 시청자가 많아 SNS에 방영 소감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김부장’에 공감하는 기성세대와 그 부하직원들에 공감하는 청년세대가 있다. 필자도 즐겨보며 각 인물에 나 자신을 대입해 보기도 하는데, 조직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다 보니 김부장에 조금 더 이입되는 편이다. 헌신했던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과 안정적인이라 믿었던 대기업조차도 잔인한 의사결정에 의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긴장감, 결국 어디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에 청년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AI으로 인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하도 몇 년 해보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청년이 심을 선택하게 만든다. 경제성장은 멈췄고 ‘계층사다리’라 불리던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 학력과 자격증은 있지만, 사회에서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 와중에 청년보장이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논의는 점점 청년에게 불리한 결정으로 이뤄진다. 사회구성 집단 중 특정 집단에 이렇게 가혹한 환경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청년은 가혹한 조건을 이겨내고 미션을 수행하는 서바이벌 게임의 참가자가 아니라 함께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로 바라보고 모든 정책에 있어 청년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청년 ‘쉬었음’은 단순 일탈이 아니다. 청년은 일하고 싶다.

취재수첩

쿠팡 사태에 흔들리는 사람들

김은지
산업부 기자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최근 각종 제재와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시장 독점, 자영업자 갑질 문제, 역외 탈세 의혹,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쿠팡이 저야할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규제의 방향과 별개로,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돼야 할 사람들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가.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판매자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고, 물류 현장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쿠팡은 ‘문제의 기업’이기 이전에 일터이자 거래처다. 쿠팡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흔들릴수록, 이들의 일상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안이 가장 먼저 감지된다. 규제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주문 감소, 정책 변경, 정산 지연에 대한 우려가 반복된다.

특히, 대체 유통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

가온다.

물류 근로자 역시 물량 축소나 근무 조건 변화 가능성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규제는 기업을 향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구조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도달한다. 규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여전히 그 충격을 완화할 전방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플랫폼을 바로잡는다는 목적과 그 플랫폼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규제가 불거피하다면, 그 이전에 거래 안정성, 정산 보호, 고용 불안 완화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는 기업을 향한 정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향한 부담이 된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속도만큼, 모든 여파를 견딜 구조는 어떻게 갖춰야 할 지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정인임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